
청년 일자리 대책

2018. 3. 15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	1
II. 추진 방향	3
III.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	
1. 취업 청년 소득·주거·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	4
2. 창업 활성화	6
3.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	8
4. 즉시 취·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	9
IV. 구조적 대응	10
V. 향후 추진계획	11
※ 첨부 : 기타 추진과제	12

I.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

①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

- '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(전체실업률과의 격차 2배 확대)되며 고착화,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('15년) 이후 20% 지속 상회

* 전체/청년 실업률 격차(%): 90년대 3.4%p (3.3/6.7) → '17년 6.1%p (3.7/9.8)

* 청년 체감실업률(%): ('15)21.9 ('16)22.1 ('17)22.7

-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·교육·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 수요부진,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

① 기술혁신, 자동화 등으로 청년이 가고자 하는 사무직·생산직 일자리 감소(경력직 채용 증가)

* 청년 취업자수(만명, '06→'17): (사무직)△26 (생산)△20 (전문)△8 (서비스·판매)+13

* 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중(% , 경총): ('09) 17 → ('17) 31

② 반도체·조선·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둔화,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민간 일자리 수요 위축

* 반도체 등 전자부품·조선·자동차 고용증감(만명, 연평균): ('10~'13)+4.6 ('14~'17)△2.0

③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

* 대기업 일자리 증감(만명): ('95~'96)+19 → ('06~'10 평균)+15 → ('11~'16 평균)+8

-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취업 기피, 모험정신·안전망 부족 등으로 창업활동 부진

* 중소기업 빈 일자리 수(만개): ('15)20.4, ('16)21.4, ('17)20.1

* 벤처기업 중 창업3년내 기업 비중(%): ('10)26.2 → ('16)5.8

④ 교육 동질화 등으로 청년의 선호쏠림(대기업·공공부문 등) 지속

* 높은 대학진학률(韓 69% / OECD 43%), 역량 동질화(상위 1% OECD 최하위)

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약

* 고용경직성 지수('13, OECD): (韓)2.37 (OECD)2.04

* 비정규직 비중(% , '06→'17): (전체)35.4→32.9 (청년)33.1→35.7 (30대)29.7→20.6 (60대)69.0→67.3

②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 어려움 예상

○ 에코세대 20대 후반 유입(+39만명), 본격 구직 활동

* 경제활동참가율(%) : (15~19세)9.2 → (20~24세)50.6 → **(25~29세)75.9**

○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하여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
구직경쟁 격화, 청년 일자리 어려움 가중 예상

* 향후 3~4년간 에코세대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(9.8%→12% 수준)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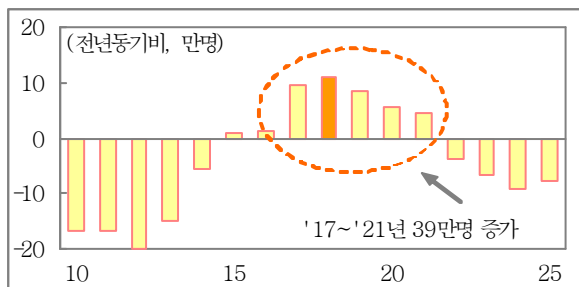
▪ 특히,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'18~'19년 어려움이 클 전망

* 25~29세 인구증감(만명): ('17)+9.5 **('18)+11.0 ('19)+8.3** ('20)+5.5 ('21)+4.5 ('22)△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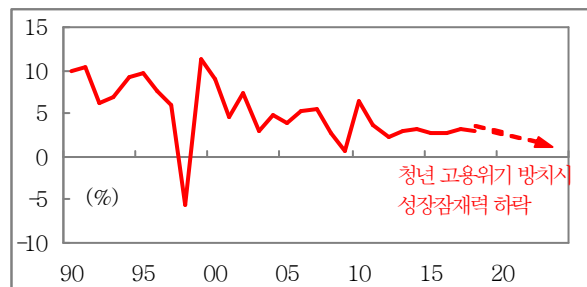
▪ 향후 20대 후반과 에코세대와 경쟁을 하게 될 30대 초반의
구직난도 심화

○ 청년 실업 방치시에는 「실업 장기화 → 인적자본 손실 →
국가 성장능력 저하(履歷현상)」 우려

20대 후반 인구 추이



경제성장률 추이



③ 특단의 한시 대책 + 구조적 대응 병행 필요

○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

▪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,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
정책수단 총동원 →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 내도록 설계

○ 이와 함께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, 경제패러다임 전환을
통한 新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 병행 필요

II. 추진 방향

- 에코세대 본격 유입 기간 중('18~'21년), 18~22만명 고용 창출
 - 에코세대 추가 실업 14만명 + 청년실업률 1~2%p 추가 감축(4~8만명)
 - * 20대 후반 인구(+39만) → [경활(+32만) = 취업(+18) + 실업(+14)] + 비경활(+7만)
- ⇒ '21년까지 청년 실업률 7~8% 수준으로 안정화 목표

【 특단의 대책 】

-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응하여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
 - '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'을 통한 체감도 제고
 - '민간부문'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
 -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'한시 추진'
- 예산·세제·금융·제도개선 등 정책수단 총동원,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대책 마련
 - ① 취업청년의 소득·주거·자산형성, 고용중대기업 지원 강화
 - 中企 취업 청년(대졸초임 연 2,500만원)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(연 3,800만원)으로 제고(1,035만원+α ↑ 효과)
 - ② 창업 활성화 → 기술·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창업 유도
 - ③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
 - 해외취업·사회적경제·新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 확대
 - ④ 즉시 취·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
 - 군 장병 교육훈련, 선취업-후학습, 일학습병행제 등 확산

【 구조적 대응 】

-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산업·교육·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대응은 지속 추진
 -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,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
 -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체계 혁신,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

Ⅲ.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

1. 취업 청년 소득·주거·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

① 신규고용 지원, 세금 면제

- 중소·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, 연봉의 1β(최대 900만원) 지원

※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보장

- ① (규모) 3년간 年 2,000만원(1인당 667만원) → **2,700만원(1인당 900만원)**
- ② (대상) 중소기업 → 중견기업도 포함
- ③ (최저고용요건) (30인 미만)1명 고용부터 지원, (30~100인 미만)2명 고용부터 지원, (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)3명 고용부터 지원 (2+1)

-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 추가 지원

-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(年 150만원 限)

* ①(감면율) 70→100%, ②(연령상한) 29→34세, ③(기간) 3→5년, ④(일몰) '18년→'21년

※ 예) 中企 평균초임(2,500만원) 청년의 경우, 年 45만원 세금 감소

- 세금을 내지 않는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은 근로장려금 지급 (EITC 단독가구 연령요건<30세 이상> 폐지)

② 주거·교통비 경감

-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,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(1.2%) 대출

* (요건) ①34세 이하, ②50인 미만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, 신·기보 청년 창업 지원 받은 자 + ③연소득 3,500만원 이하 + ④보증금 5천만원(60㎡) 이하 주택

※ 시중은행 전세 대출(3.2%) 대비, 최대 年70만원 이자부담 경감

-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中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* 지급

* 택시·버스·지하철·고속버스 등 사용가능한 청년 동행카드 발급

3 목돈 마련

- 중소·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
 - * (현행) 청년 300 + 기업 400 + 정부 900 = **2년 1,600만원** →
 - (신설) 청년 600 + 기업 600(고보 지원) + 정부 1,800 = **3년 3,000만원 (청년내일채움공제)**
- 2년 이상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원 목돈 마련
 - * (현행) 청년 720 (5년) + 기업 1,500 (5년) = **5년 2천만원 이상** →
 - (신설) 청년 720 (5년) + 기업 1,500 (5년) + 정부 720 (3년) = **5년 3천만원 (내일채움공제)**

4 대기업·공공기관 취업

-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*
(청년친화 기업**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)
 - * (중소·중견) 3년간 1인당 年 700~1100만원, (대기업) 2년간 1인당 年 300만원
 - **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
- 기업(대기업 포함)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* 추진시 규제완화, 조기 인허가 등 현장 애로해소 지원
 - * 예) 자동차부품·OLED 디스플레이, 인공지능·5G, 스마트카, 웨어러블 로봇
- 수시증원(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), 명퇴 활성화(퇴직위로금 지급) 등으로 '18년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(2.3만명→2.8만명+α)
 - * 中소 경력자는 중진공, 산기보 등 中소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,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청년의무고용(정원 3%) 시범 도입

<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가 받는 혜택은? >

- ☞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(50인 미만)에 신규 취업하여 2,500만원 연봉(中소 대졸 초임 평균)을 받는 경우, 年1,035만원+α 수준 실질소득 증가

소득 지원 (세금 감면)	자산 지원 (청년내일채움공제)	주거비 지원	교통비 지원	합계
45만원	800만원	70만원	120만원	1,035만원+α* 수준

* α : 신규고용 지원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득 추가(최대 900만원) 증가

※ 대책 효과에 따라 중기 취업자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
: 대졸 초임 年임금(만원, '16 경총):(대기업)약 3,800 (中소)약 2,500

2. 창업 활성화

① 창업자금, 사업서비스 지원

- 생활혁신형 창업자* (최대 1만명)는 1천만원 성공불 용자 및 5천만원 추가 투융자, 기술혁신 창업자** (최대 3천명)는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
 - *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·응모 →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발
 - **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·주요기업·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
-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포함하여 선정(200개)하고, 인큐베이팅·국내정착·비자(Visa) 등을 원스톱 맞춤형 지원
-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('18년 2.6조원) 조기 전액 투자 유도 → 소진시 추가재원 확보
 - * 창업초기 펀드(2,800억원) : 재정출자 비율 확대 추진
 - 성장(Scale-up) 지원(약 2.3조원) : 조기 투자 성과보수, 펀드재원 추가 위탁운용
-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* 확대, 사업지원 바우처(年 1백만원·3년) 지급으로 회계·세무·노무·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
 - *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

② 창업기업 세금 면제

-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·소득세 100% 감면
 - * ①(감면율) 3년 75% + 2년 50% → 5년 100%, ②(연령상한) 29→34세, ③(업종) 청년 창업 다수업종 포함(전자상거래,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), ④(지역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포함
- 年매출 4,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(연령·지역 무관)는 5년간 법인·소득세 100% 감면

③ 민간주도 창업 지원, 지방창업 우대

-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·지원·관리하는 **민간주도 창업지원(TIPS*)** 사업 단계적 확대(年 200개 기업→500개 기업)

*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 선투자 →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

- 창업·벤처 기업의 성장(Scale-up)에 필요한 R&D비용 등 최대 20억원(3년)을 지원하는 “**후속 창업지원(Post-TIPS)**” 사업 신설

- 대전(연구단지)·판교(판교밸리)·서울 강북(마포*)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(TIPS타운)을 지방 등으로 확산

* 신보사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창업공간을 DB화하여 활용도 제고

-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(現 최소 1억원)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(TIPS) 대상에 포함

④ 대기업을 창업·벤처기업 지원 유도

- 대기업(자금·기술력)과 창업·벤처기업(혁신성)이 각자 강점을 살려 **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** 체계 구축

* 예) 현대차 : 스타트업 육성, 조인트 벤처 설립,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
LG그룹 :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연계기능 강화

- 창업·벤처·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**R&D·판로확보**를 위해 대기업의 **유통 플랫폼**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

* 판교밸리 등 벤처 집적단지에 창업·벤처·중소기업 R&D 지원기능 강화

< 청년창업가가 받는 혜택은? >

【 기술혁신 창업가 B씨 】

- (예비창업) 1억원의 오픈바우처
- (초기성장)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+ 공공 창업공간 임대료 절감 (1천만원 이상) + 年 1백만원 세무·특허 등 바우처 + 年 156만원 세금 면제
- (본격성장) 후속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20억원 + 혁신모험펀드 투자

【 생활혁신형 창업가 C씨 】

- (창업초기) 1천만원 성공불 융자 + 세금부담 “0”원(연매출 4,800만원 이하)
- (본격성장) 5,000만원 투·융자

3.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

①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

- 지자체 추경(3.1조원)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,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('21년까지 7만명+α)
 - 국고 매칭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중심 지원
-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·자금(1~5천만원)·멘토링 등 지원하고,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

② 해외 취·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

-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(연봉 3,200만원 이상) 취업기회 확대
 - * 해외진출 기업·한인기업·국제기구 채널 활용, 군산·통영 지역에 거점 청년센터 설립
-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年 1,000만원 성공불용자 지원
-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(가칭 한국 평화봉사단)을 확대('18년 2천명 → '21년 4천명)하고, 연간 2,000만원 지원(항공비는 별도 지원)

③ 新서비스

-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·창업 기회 확대
 - 숙박·차량·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*하고 원격의료 지역·모델 확대**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*** 추진
- * (공유경제) 공유숙박 허용(180일 이내), 키폴 운영기준 마련 공공기관 회의실·주차장 등 공유
- ** (지역) 7개 시·도 → 3개 시·도 추가 (모델) 4개 → 치매·재활관리 등 2개 모델 추가
- *** 의료행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해석팀 운영 및 新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 정비 등
- 4차 산업혁명 분야 新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
 - 블록체인·드론 시범사업 추진, IoT 제품·서비스 시장 출시·확산 지원 및 개인정보 개념체계 재정비*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
- * 개인정보·익명정보·가명정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(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)

4. 즉시 취·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

① 軍 장병 취업

- 軍 부대-지역 中企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·교육 등 지원, 전역 후 지역 中企 취업 지원*
 - *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6.9만명이 진로 미결정('16년)
-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* 하고 전문상담, 현장체험, 교육 등 취업 지원(22개 사·여단, 年5천명)
 - * 복무중 직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 발급 → 취업시 활용(美 VMET 벤치마크)

② 선취업-후학습, 일학습병행제

- 후학습 희망 청년은 '주경야독 장학금'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,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
 - 재직자 과정 개설 대학은 정원확대 유도 및 야간·주말반 운영비 지원
 -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원 장려금 지급
-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('獨 아우스빌동' 사례) 참여 청년에 훈련비, 軍 보직 연계 등 지원('18년 150명 → '21년 2천명)

< 한독상공회의소 주관 "아우스빌동" 사례 >

- 지원대상 : 특성화고·공업고교 등 3학년(고용계약 체결 후 급여 지급)
- 참여기업·대학 : 메르세데스 벤츠, BMW, 두원공과대, 여주대
- 교육과정 : 3년간 현장실습 교육훈련(OJT) & 전문대학교 이론교육 병행

③ 미래 핵심인재 육성

-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(기업·폴리텍 등)과 취·창업 연계 →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(1만명)
 - * 유망산업 분야(AI, IoT 등) 해외연수(1년)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
- 대기업 교육·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,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→ 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(1만명)
 - * 참여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

IV. 구조적 대응

①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수요 창출

-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,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차원 프로젝트로 육성(중기재정계획 반영+규제 혁신 등)
- 혁신성장 선도사업(스마트시티, 자율차, 핀테크 등)에 대한 재정 집중 투입 및 공공수요 창출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주력
- 주력산업(반도체·조선 등)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방안 수립

② 사회보상체계 혁신으로 창업 및 中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

- 모험자본 공급 확대(혁신모험펀드 조성 등),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강화(연대보증제 폐지 등) 등을 통해 창업 도전의식 고취
-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, 中企 공동 R&D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-중기 격차 해소

③ 인적자본 고도화,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·훈련체계 혁신

- 자유학기제 내실화·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및 대학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 제고
- 직업계고·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등 직업교육·훈련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, K-MOOC 강좌 확대 등 성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

④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

- 청년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
* 예) 청년대표 참여, 청년 일자리 문제 최우선 논의 의제 포함 추진 등
- 실업급여 확충* 등 청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,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입지, 재정, 금융 등 인센티브 확대**

* 실업급여 기간 연장(90~180일→120~240일), 장기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추진 등

** 예) 전용 임대시설 공급, 재정사업 우선지원 취득·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확대 등

V. 향후 추진계획

① 정책 수단별 추진 계획

- (예산)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신속 추진
 - 결산잉여금,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하여, 직접효과·체감도 높은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
 -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, 4월중 국회 통과 목표
- (세제) 中企 청년 소득세 면제, 저소득 청년 EITC 지급,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은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
 - 조특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, 4월중 국회 통과 목표
- (금융) 창업기업 투융자* 등 과제 융자지침 신속 마련 등으로 상반기내 집행 가능하도록 추진
 - * 성공불융자 지침 마련, 혁신모험펀드 운용사 보수체계 개정 등
- (제도개선) 新서비스 분야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 과제들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 목표로 추진
 - * 공유숙박 허용(공유경제), 의료기기 분류체계 정비(건강관리), 개인정보법 개정(빅데이터) 등
- (지자체 추경) '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(3.1조원)을 4.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, 지자체 추경 독려
 - * 4월내로 지자체별 추경(안) 편성 완료, 5월중 지방의회 통과 후 본격 집행·독려

② 구조적 대응 과제는 임기내내 지속 추진

-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추진상황, 체감도 등을 “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*”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·보완
 - *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, 기업, 민간전문가, 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신설
- 산업·교육·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
 -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,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 수립·추진
 - 고용안정·유연모델 구축방안을 마련하고, 직업교육·훈련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

첨 부

기타 추진과제

1. 취업 청년 소득·주거·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

- ▶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
 - * ('18년) 30만원, 3개월 → ('19년) 50만원, 6개월(졸업·종퇴후 2년 이내 청년 대상)
- ▶ 기존산단 리모델링*, 신규산단 모범사례 조성**을 통해 주거·복지·문화·교통여건 등 개선으로 청년이 가고 싶은 산단을 조성
 - * '18년 시범산단 6개소 선정 → '22년까지 25개로 확대
 - ** 신규 국가산단 및 도첨산단 대상 '19.上 3개소 이상 착공('21.上 준공)
- ▶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 - 고용 1인당 감면한도 적용시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감면한도 상향
 - * (現) 상시근로자 1,000만원 → (改) 청년 상시근로자 2,000만원
- ▶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개편*
 - * ①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전용자금 신설(3천억원),
 - ②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환급제도 확대(1명 고용시 0.1 → 0.2%p ↓)
 - ③청년고용특별자금 2배 확대(年2천억→4천억원) 및 대출한도·금리 우대
 - <(現) 2.74%(1억원 한도) → (改) 1명 고용 : 2.54% / 2명 이상고용 : 2.34% (각 2억원 한도)>
- ▶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 R&D 지원체계 개편
 - * ①R&D지원금 4~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(과기부 등 11개 부처, 1.2조 → 2,600명)
 - ②사업화 단계 기술료를 청년채용시 감면(50%, 기술료 징수총액 2천억원 → 2,200명)
 - ③청년채용 인건비를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(2,000명)
- ▶ 건축물 화재안전 조사 및 DB 구축 사업시 청년 중심 고용(~'18년, 약 1,100명)
 - 전국 215개 소방서별 합동점검단 편성·운영, 1개반 점검인력 3~7명
- ▶ 국유재산 총조사시 조사인력 50% 이상 청년층 중심 채용('18년, 약 1,000명)
- ▶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(고용부, '18년 1,114억원)을 활용하여 고용 위기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전컨설팅 등 지원
- ▶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부여
- ▶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우선 선정
- ▶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도록 신규채용·임금보전* 등 지원 강화,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등 생산성 제고 지원
 - * 現 신규채용 인건비(1인당 月40~80만원) 및 임금보전(1인당 月최대 40만원) 지원

2. 창업 활성화

- ▶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'일자리 매칭펀드(1천억원)*', '청년일자리 지원펀드(1천억원)' 등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
 - * 민간 벤처캐피털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후속투자시 정부가 1:1 매칭투자하는 펀드

- ▶ 도시재생 지역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 창업(집수리·마을카페 등) 활성화 및 업사이클 분야* 청년 창업 촉진
* 재활용품 공유·거래가 가능한 '소재뱅크' 구축, 온라인 판매처 구축, 지재권 출원 등 패키지 지원 → '22년까지 450개 업사이클 기업 육성(1,710명 고용창출)
- ▶ 청년창업농·어 사업을 확대('18년, 1,200명 → 총 2,400명)하고, '복합형 청년몰'을 조성하여 청년상인 육성('18년, 400명+α 신규)
- ▶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유휴공간(국유재산·주민센터 등)을 조사하여 특성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, 청년창업자에게 저가 공급
- ▶ 글로벌 창업특화 BI 운영(베트남 등 아세안), 주요국 엑셀러레이터 DB 구축(→매칭), TIPS·창업선도국 창업플랫폼(英 Enterprise-Hub 등) 연계

3.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

- ▶ 관광, 의료, 공정무역 등 청년 취업이 유리한 업종에서 인턴십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취·창업기회 획득('18년 660명→'21년 2,000명)
* 인턴십 운영 기업에 월급여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지원('18년 80억원→'21년 500억원)
- ▶ 세제, 입지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
* ①(세제) 대기업 부분복귀시 조세감면 신설(법인·소득세 3년간 100% + 2년간 50%)
②(입지)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, 장기임대(50년), 임대료 특례(1%) 및 최대 100% 감면
③(제도)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는 One-stop 시스템 구축
④(기타)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, R&D사업 등 지원 우대

4. 즉시 취·창업할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

- ▶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개선
- 동일기업 근속시 中 소 의무종사기간 단축(2→1.5년),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허용
- ▶ 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(고용센터-교육청 MOU, '18.7~),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확대('18.下, 2→3천명) 등 취업지원 강화
- ▶ 병 봉급인상과 연계하여 목돈마련저축제도(희망적금) 확대
* 적립금 상향(월 10→20만원), 추가금리 및 비과세혜택 부여
- ▶ 유급지원병 보수 일반하사 수준 인상, 장기복무 선택 허용 등으로 유급지원병 기회 확대('17년 4,000명→'18년 이후 年 8,500명)
- ▶ 기업 채용 공고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공개 유도 및 워크넷에 AI 매칭 도입
- ▶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확충 : 운영비 등 재정지원 강화
- (사내대학) 설립·운영 요건 완화*,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
* 대학 위탁 및 중소기업 공동설립 허용, 입학 자격 확대
(<現>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에 한정 → <改> 타기업 동종업계 종사자도 허용)
- (계약학과) 입학 1년 만에 취업 후 학업을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, 운영대학에 재정지원(10개교, 교당 20억원)